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

VOL.31

2024.7.1.~2024.7.31.

*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정책활동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7.2.)

- 중견련은 2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기업들에 위험을 부과하고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호소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7.3.)

- 중견련은 올해 경기회복세 개선 전망에도 내수 위축, 민생 애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힘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일자리를 2035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증가한 800만 개 이상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2024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7.11.)

- 중견련은 글로벌 불안정으로 경제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중견기업의 45.9%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인력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지원사업 확대(29.4%)', '세제지원 확대(21.4%)', '고용 유연성 제고(18.4%)',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12.6%)', '산업단지 및 지방기업 인프라 조성(10.9%)'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2024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7.18.)

- 중견련은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이 중 88.4%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4.0%)', '금리인하(27.4%)', '물가안정 및 내수활성화(18.9%)' 등의 제도적 지원 필요 촉구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7.18.)

- 중견련은 18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 경제6단체는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강행 처리하고 있는 데 대해 입법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힘

□ 노동조합법 환노위 의결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7.23.)

- 중견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밝힘
- 중견련은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하고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당부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7.25.)

- 중견련은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힘
- 전체 중견기업의 43.0%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축소 업종의 대다수가 서비스업으로 내수 회복을 위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

*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정책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7.3.)

-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이라는 비전 하에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 ▲노동 기반 선박 건조시스템에서 자동화 기반 선박 건조시스템으로 혁신 목표 설정
-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최소 2조 원 이상 투자

□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7.3.)

- 정부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
-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병행

□ [기획재정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7.10.)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입법 추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25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27년) 등 제도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7.16.)

- ▲무역보험 5조 원 추가 확보 올해 총 370조 원 무역금융 공급,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 90조 원 공급 및 수출 보험료 50%할인(~'24.12월),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성장금융 지원 한도 최대 5배(10억 원→50억 원) 확대,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 집중 개최 등 지원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7.25.)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27.12.31.) 연장, ▲통합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 하향 조정(50%→40%),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 확대(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등 발표

*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 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 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7.25.)

-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 강화, ▲FTA·통상종합 지원센터(☎1380)를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해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 및 정보제공 등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7.26.)

- ▲하반기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 추가 발굴('24년 총 40개), ▲수출 지원기관 추가(신용보증기금, 17개→18개),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

*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입법동향

1 정부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7.8.)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후속조치로 ①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격리시설에 저장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 ②배출량 차감 대상에 이산화탄소 저장 추가 등의 내용 제정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9.)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해 ①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 구체화, ②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면제 거래 규모 및 거래유형 구체화, ③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절차 및 방법 구체화 등을 제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26.)

- ①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②중소기업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3년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2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9%, 일반 투자 7.5% 공제율 적용 등

□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26.)

- ①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 R&D 활동 우수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②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폐지, ③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 하향(50%→40%), 최저세율인 10%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1억 원→2억 원), ④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폐지 등을 규정

□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7.29.)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의 전부 및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주기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30.)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중복 공시사항 정비에 따른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 및 변동 사항 제외

2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 7.1.)

-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김태년 의원, 7.3.)

-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 의원, 7.8.)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신설하여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
-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 지원을 위해 실행계획 수립·시행,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 규정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 7.18.)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소규모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7.25.)

- 에너지 및 용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고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

✓ 법제사법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7.17.)

-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이용 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7.18.)

-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합병 등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 규정

✓ 정무위원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7.10.)

- 공급업자, 대리점간 거래에서 동등한 지위 보장, 대리점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 보호제도 개선 및 마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7.10.)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시 전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필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하는 등의 내용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7.22.)

-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의원, 7.26.)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

✓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7.3.)

-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 규정,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 관련 특례 일몰기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 7.8.)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및 이월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각각 10%씩 상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설비 투자도 시설 투자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 규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 7.15.)

- 수도권 지역 과밀화 해소를 위해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 차등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의원, 7.16.)

-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 반영하는 등의 내용 규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7.19.)

-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 인하

✓ 환경노동위원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 7.19.)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일정 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공장 증설,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7.19.)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

✓ 국토교통위원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의원, 7.3.)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한시조항 삭제 및 상시화

*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지원사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4년도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7.1.)

- 10월 30일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전환활용 인프라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 탄소중립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분석 및 시험 평가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평가·인증 관련 시험설계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7.3.)

-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과 생산기업을 선정해 세계일류 상품 및 기업으로 자리매김 지원
-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기술 경쟁력을 인정하는 기업이라는 홍보효과, ▲산업부·KOTRA 등 11개 기관이 제공하는 수출 지원서비스 우대*, ▲해외 전시회 참여 등 지원하며, 8월 9일까지 신청 접수

* 대출한도·금리 우대/수출환어음 감면 등(IBK기업은행), 중견글로벌 사업 우대 등(KOTRA), 보증 한도·보험료 우대(무보/신보/기보),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가점(산업부) 등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추가공고 (7.9.)

- 비수도권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5인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제작 지원,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연계 등을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7.16.)**

 - 8월 14일까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년도 산업별 디지털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7.16.)**

 - 8월 10일까지 수출 희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축적한 바이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행사까지 연결하는 O4O(Online for Offline) 방식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7.24.)**

 -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 등 수출지원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점 등 지원
- **[고용노동부]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 신청 (7.19.)**

 - 8월 16일까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 중견기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자보전) 사업 변경 공고 (7.31.)**

 -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 대상으로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자금 지원,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